

동사무소 명칭변경, 이유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 정 현 율

동사무소의 명칭이 지난 9월부터 동주민센터로 바뀌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그 동안 동사무소는 읍·면사무소와 함께 국가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시책을 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 대민행정의 점점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출생신고부터 시작하여 때 맞춰 취학통지서, 징집통지서, 예비군훈련통지서를 배부하였고, 각종 공부 열람, 세금납부는 물론 사망후에는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동사무소와의 인연이 마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사무소는 읍·면사무소와는 달리 시대상황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일제시대이래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리'와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61년 과도기적 형태인 행정동제 도입을 거쳐 1988년에 비로소 읍·면과 동일한 지위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90년대이후 교통·통신의 발달로 행정의 광역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동사무소는 또 한차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단속업무, 동원업무 등 권력적 행위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단순 생활민원업무만 담당토록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동사무소의 탈관청화(脫官廳化)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81여개의 동사무소가 통폐합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동의 명칭변경도 이러한 진화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과거의 변화

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전국 1,600여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7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 집에 따라 민원발급이 주된 사무였던 동사무소의 존재이유가 없어졌다. 반면,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 가보면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복지센타에서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자에 가까운 사회복지사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의 상담실에서 개별상담을 통하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추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젠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설된 87개 복지관련 사무를 포함한 368여개의 8대 주민생활지원사무를 통합 관리하고, 전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주민센타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추진중이며, 자원봉사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국의 동주민센타에 2,118개소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3,90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사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이라기 보다는 기능이 다한 과거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민센터가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동사무소가 공급자 중심인 행정관청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고,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 이라고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자꾸 불러주면 주민센터는 한송이의 꽃이 되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